

# 2023 행정사무감사

##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공간이음 1층,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3년 11월 29일(수)

발 신 / 2023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설재균 간사,  
042-331-0092/010-3583-8786)

제 목 / 2023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활동 결과 발표 및 우수위원 선정

---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3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023년 대전광역시의회의 대전광역시 및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연대한 기구입니다.
3.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3여명의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23년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4.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평가가 담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네트워크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우수위원을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은 9대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이며 의정활동을 평가하기에 짧은 시간 등을 이유로 선정하지 않았지만,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모니터링 진행 후 상임위원회 별 우수위원을 선정했습니다.

6. 2023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 아래 -

내용 : 2023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문의 :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설재균 간사(042-331-0092/010-3583-8786)

기타: 모니터링결과 내용은 하단 참조

# 2023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1. 개요

- 2023년 오송참사가 벌어지고 칼부림 사건이 지속되는 등 공공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전에서도 교사가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는 등 교육 행정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여론도 많았다. 2년차가 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공약 사업 감사도 필수적이다. 대전 0시축제 등 대형 축제가 진행되었고, 보물산 프로젝트 등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주민참여예산 축소, 인권센터 및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폐쇄 등 시민참여도 사라지고 있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9대의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이고, 전반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대전광역시의의회는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 대전광역시의의회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스스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의회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감시와 행정 견제인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시기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전시민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 **2023**년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23**여명이 모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2023**년은 **4**개 상임위원회를 각 참여 단체의 전문성 및 시민의 관심도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 했다. 해당 모니터링 참여자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의 발언 중심으로 평가하며, 기존 지표인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 등을 활용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 2. 4개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평과 결과

- 각 상임위원회 별 주요 질의와 평가 내용을 담았다.

### 1) 행정자치위원회

#### ○ 주요 질의

##### ■ 민간위탁 관련

-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결정을 지적함. 대전인권센터 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 또한 지적함. 위수탁 기관 변경 이후 성과 평가 결과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두 기관의 위수탁 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함.

##### ■ 대전예술의전당 공연 취소

- 대전예술의전당 **20**주년 기념 공연이 하루 전 취소된 것과 관련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함. 무대설치 용역계약시 업체의 적합성을 파악하지 못한 점, 대전시와 대전예술의전당이 이중으로 점검하지 않은 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점을 지적함. 이후 제대로 된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함.

##### ■ 원자력 안전

- 대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유 중인데, 대전시가 이 사실을 2016년 국정감사까지 몰랐으며, 시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사용후핵연료 반환계획이 잘 이행되지 않은 점,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 등을 짚고 공론화와 속의 과정을 거쳐 논의할 것을 강조함.

○ 행정자치위원회 총평

- 위원별 질의 분량, 시정 이해도, 태도 등 격차가 매우 심했음.
-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질의가 많았음. 전반적으로 당부에 그치는 감사가 진행되어 견제, 감시 역할이 부재했음.
-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질의가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임.

## 2) 복지환경위원회

○ 주요 질의

■ 돌봄 및 여성 관련

- 육아 및 보육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와 지원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 차원에서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통합 돌봄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는 점, 타 지자체와 비교해 예산이 적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함.
-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여성 분야 연구 기관이 열악함을 지적함. 여성정책 발굴과 연구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함.

■ 일회용품 사용 관련

- 정부의 일회용품 보증금제 유예와 관련하여 대전시 차원의 대책과 현황을 질의함. 이후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당부함.
- 질의대부분이 대부분 단편적인 질의에 그쳤지만, 투명 페트병 수거 관련, 온실가스 감축 방안, 탄소포인트제 등 다양한 환경 의제를 다룬 것은 유의미함.

○ 복지환경위원회 총평

- 전반적으로 질의에 대한 사전설명이 장황하여 실질적 질의는 부족했음.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질의가 필요해보임. 분야에 따라 질의 수준이 많이 달라짐. 돌봄 및 여성 관련 질의는 잘 진행됨.
- 16일 시설관리공단 감사 과정에서 장시간 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있었음.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몇 시간 동안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임.

- 피감기관이었던 시설관리공단 이상태 이사장의 답변 태도가  
매우 불성실했음. 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이어간 것은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음.

### 3) 산업건설위원회

#### ○ 주요 질의

##### ■ 대전사랑카드

-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지급현황을 바탕으로  
일반사용자(37억)에 비해 복지대상자(4억)의 카드 활용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함. 실질적인 복지 대상을 타겟으로  
대전사랑카드 사업을 진행했으나 현재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함. 예산이 많이 소진되지 않아 국비  
83억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소진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함.

##### ■ 트램 관련

- 수소트램 진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예산, 안전 문제, 실행  
가능 여부 등의 다양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나 단편적인  
질의에 그쳐 실질적인 견제, 감시 기능은 부재했음.
- 핵심적인 질의보다는 디자인, 상권 활성화, 관광상품화 등  
지엽적인 질의가 많았음.

##### ■ 전세사기 피해 대책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불법 중개자 단속 등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유의미함.

#### ○ 산업건설위원회 총평

- 감사 대상이 많고 규모가 큰 사업을 많이 다루는 위원회인 것에  
비해 시장 공약사업 점검 등 견제, 감시 기능이 부재했음.
- 이틀에 걸쳐 피감기관 2개씩 감사하려던 일정을 변경해 4개의  
피감기관(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감사를 한번에 진행하여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4) 교육위원회

##### ○ 주요 질의

###### ■ 교권 문제

- 올해 전국적으로 교사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대전에서도 교사 사망 사건이 있었던 만큼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많았음. 그럼에도 학교 앞 근조화환 처리 문제만 언급하는 등 핵심적인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 늘봄학교 시범운영

-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이라고 하나 늘봄학교 주체인 학생들의 실 권리 등 객관적인 평가 없이 2024년 시범운영을 70여개로 확대하는 것의 문제점 지적함.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필요함을 환기시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늘봄학교의 문제점을 제시함.
- 늘봄의 핵심사업인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 방과후학교 확대라는 방향성은 늘봄학교의 실패를 의미하므로 과감하게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폐기할 필요 있음을 강조함.

###### ■ 유보통합, 유치원 취원율 문제

-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된 상태. 시청과 함께 유보통합 추진 준비중이나 재원 부족분에 대한 대책 요구함. 사립유치원 대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6.4%이어서 공립 취원율이 현저히 낮음을 피력

###### ■ 학교 급식 장기파업 관련

- 대전시교육청과 대전학비연대회의 단체협약교섭 과정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질의 중 반노동적 시각에서의 발언이 있었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쟁의권을 확보하고 진행한 파업에 대해서 ‘예상치 못할 지출’, ‘피해’라는 표현을 사용함.
- 해당 발언은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에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았음.

##### ○ 교육위원회 총평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구민 소수의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에서 질의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듯함.
- 행정감사가 시의원 지역구 관리를 위한 민원해결 창구로 변질되어 민원해결이 아닌 대전시교육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야가 필요해보임.

-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하지 못하고 일부 협소한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하고 주장하여 논리적 설득력 빈약함.
- 늘봄정책, 유보통합 과제, 유치원 취원율 제고, 학교밖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업무경감 등 교육청 정책과 행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총평

-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9대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훨씬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감사였다. 작년보다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했으며 시의성 있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또한 작년보다 다양한 주제의 질의가 등장한 점도 유의미했다.
- 하지만 다양성이 확보된 것에 비해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질의가 많았다. 여러 주제를 다루는 것만이 좋은 감사는 아니다. 늘 나오는 지적이지만, 질의 이후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업 설명, 현황 파악의 자리가 아니다. 대전시를 견제, 감시하려면 노력을 당부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향후 대책을 묻고 대전시의 더 나은 방향을 촉구해야 한다.
- 또한 지역구 사안 등 민원성 문제제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전시 정책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대전시를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 있다. 대전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견제, 감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기관 수탁에 관한 질의와 충실한 현장 조사 등 유의미한 활동도 있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통합돌봄, 장애인 시설, 뷰티 진흥원, 청년내일센터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 낸것은 긍정적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스마트 제설기, 갑천 고속화도로,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 공사 하자 등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한 것은 유의미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석면문제와 질의의 데이터화 등 유의미한 질의가 있었다.
- 2023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2023년 정책감사가 이뤄졌는지 대전시의회의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시민과 함께 할 것인지, 평가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4. 2023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네트워크 우수위원 선정 결과

- 모니터링에 참여한 인원이 매일 기록한 위원별 점수와 전체 모니터링단이 모인 평가회의를 통해 우수위원을 선정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 조원휘 위원 : 핵폐기물, 시민안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인권 및 고용문제, 민간위탁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와 자료를 제시하며 질의했고, 일부 의제에서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였다.
  - 복지환경위원회
    - 안경자위원: 대전시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구체적 근거를 들어 문제를 제시한 점은 유의미 했다. 돌봄, 육아 및 보육문제 관련한 질의는 시기적절한 질의였으며,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 산업건설위원회
    - 송대윤 위원 : 평촌 산업단지 노동자 사망사고 언급과 안전관리 대책 질의는 노동자 관점에서 질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의미 했다. 현 시장의 공약 이행에 문제제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했다.
  - 교육위원회
    - 김민숙 위원 : 교육청의 미흡한 자료제출에도 이전 자료까지 찾아 준비한 행정사무감사였다. 학교시설 개방문제, 기관별 초과근무 인증방법, 늘봄학교 시범운영 평가 등 수치화 시킨 질의가 많았고, 개선을 이끌어내는 방식도 설득력이 높았다.

**2023.11.29**

**2023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평화여성회,여성인권티움,풀뿌리여성마을숲,실천여성회판),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대전YMCA,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전교조 대전지부,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대전지부